

지식자본 확충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상무 유병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를 새로운 활로로 파악하고 그동안 이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도 한국의 지식자본 축적과 효율성이 저조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지식자본은 토지, 공장, 설비 등 물적 자산이나 현금, 주식투자 등 금융 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된 무형 자산을 말한다. 국가 지식 자본은 국민들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시장자본, 정보의 축적과 활용 등에 필요한 지식 인프라로 구성되는 과정자본, 연구개발 능력을 토대로 한 혁신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지식 자본의 축적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가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지식 자본 축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지식자산지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여 지식 자본 축적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번째는 국내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시장자본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점이다. 시장자본지수의 악화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서비스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진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신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도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식경제로 발전하는 데 근본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높여준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새로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의 주체는 바로 인적자본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혁신자본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빠른 속도로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혁신자본지수는 미국, 독일,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혁신자본지수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의 차이는 1997년 0.21포인트에서 2005년 0.1포인트로 축소되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혁신자본이 샌드위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세계시장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다섯째, 한국의 지식자산 투입 성과는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지식자산 투자에 의한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자본지수/지식자산지수의 값은 1998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분석 대상 7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지식 자산 활용도와 효율성이 비교 상대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식 자본이 토대를 둔 지식기반경제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법률, 소프트웨어, 문화, 관광과 같은 산업 부문의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국내 고급 두뇌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여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 고급 두뇌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급 두뇌의 유출 방지를 꾀하는 한편, 이민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자본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자산의 유통과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식 자산 투입의 성과 역시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국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 제공, 대학과 출연연구소 연구 성과의 경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 지식 자본의 유통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